

ISSUE & FOCUS

Newsletter 2018-3(2)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한림대학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탱해 온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세 가지다. 세계유일 3대 세습 왕조국가의 적화통일 전선전략에 의한 핵미사일 체제 완성과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시각 차이, 친북 반미 세력에 의한 남남갈등 조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도 대한수입규제와 전방위적 통상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미동맹이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되면 한미통상 마찰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이 통상압력 자초

2015년 9월 선진국 정상들이 참석을 꺼리는 중국의 전승절에 우리나라 대통령 참석은 대미관계에서 불협화음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국 경사의 외교는 득보다 실이 컸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해 온 미일로부터의 불신이고 북핵·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결정에 맞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이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중국에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 MD체제 가입, 한미일군사협정 가입 없음) 약속까지 었었다. 한미동맹에 파열음은 더욱 깊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파리기후 변화협약과 TPP 탈퇴, NAFTA와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필자는 2016년 11월말 한중포럼(산동 대학)에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분야별 어프로치로 치닫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개별품목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로 무역수지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레이건과 부시정부 때 일본 길들이기와 닮아 있다.

이러한 공격적이고 일방적 압력으로는 미국의 대외적자 8천억 달러 삭감은 요원하며 설령 가능할지라도 성장전략이 가동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만 불어날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적 관세폭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것도 북한비핵화를 향한 대북제재가 최고조에 달한 금년 1월 통상법 201조에 의거하여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는 120만대 저율관세할당(TRQ) 이하 물량일 경우 20%, 초과분은 50%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관세할당,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관세와 더불어 남발문제만 없다면 WTO도 용인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소비자 이해관계를 역이용하여 부당성을 주장하고 양자간 협의 등을 통해 피해보상 요구는 물론 보복조치도 가능하다. 물론 WTO에도 제소할 수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사이 우리수출과 일자리는 일대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위협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3월 중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제재 12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에는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지역이 대상이었다. 마지막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재협상 카드용, 일본과 호주는 동맹국, 기타국은 대미수출액과 중국산 수입액 기준에 미달하여 제외되었다. 한국은 대미철강 수출 제3위국인 동시에 중국산 강판수입에 의한 강관수출(한국통계로는 불과 2%에 불과)이 많다는 이유로 관세 추가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한국 철강이 제외될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다. 한미FTA 재협상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측불허이다. 문제는 덤핑당사국인 중

국산 수입강판으로 가공한 양질의 강관제품을 쉘 가스 업자들에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한국을 단순한 중국철강의 우회수출기지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으려는 미국 행태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핵화 담판이 결렬되면 통상마찰도 격화될 것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미국이 상정하는 비핵화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방의 대북제재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친북반미세력의 대미반발은 거세게 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위협을 근거로 한 고관세 부과 대상을 여타 업종으로 확산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훼손과 통상마찰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한미동맹 훼손과 통상마찰의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대비하여 시나리오 별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 훼손과 통상마찰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국익차원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평소 일부 친북반미세력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언필칭 3대 본체로서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존을 오랫동안 학습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유’라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한다.

둘째, 일상적인 양자 혹은 다자간 WTO 분쟁해결 절차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안보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마찰을 해소해 가야 한다. 미일 통상마찰을 겪은 일본의 경험을 우리가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미일섬유와 자동차 분쟁, 시장개방과 분야별 협상, 결과중시형 통상협상, 미일구조협약의 등등 미일간의 수많은 통상마찰역사를 보더라도 안보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적었고 해결 역시 비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끈질기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며 수요자 논리로 맞섰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내 통상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한국에 대한 보복관세대상 품목 대부분이 현지소비자의 맞춤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및 미국 현지 R&D투자가 가미된 고부가치 품목군에 속한다. 이런 설명과 곁들여서 미국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자국 산업피해는 과장되고 소비자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국내업계단체와 미국 내 친한 민관채널을 사장시키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

셋째, 차제에 ‘한미구조협약(SIIC: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for KORUS)’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마찰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적인 단기, 중장기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7년 중국에 대해 대미흑자 총액 3,752억 달러 중 1천억 달러를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역수지는 저축과 투자 갭의 사후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거시경제운영의 성과와 경제주체의 행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경제와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한미구조협약’을 신설하여 1년 안에 양국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와 우가 공히 선진무역강국 비전과 정책 공유해야

넷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민관협조에 의한 체계적인 협상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요즘이 그러한 시기이다. 한중일 주도의 효율적인 동아시아 글로벌 체인의 존재야말로 미국경제가 안정성장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미국의회, 행정부, 업계와 학계에 인식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지역은 EU와 같은 최종제품 분업권과는 달리 중간재 분업권으로서 효율성이 훨씬 높아 양질의 저렴한 중간재를 세계에 공급함과 동시에 시장확대 효과가 높아서 향후 미국 잠재성장과 대아시아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최대시장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이 앞으로 중간재 상호공급으로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 일 EU 등 선진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시장개방을 선도해 간다면 미국이익과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고 넓게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포괄적 경제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마찰의 근본원인인 미중마찰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미국 탈퇴로 반신불수가 될 뻔했던 TPP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연대(CPTPP)로 재생시키고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 참가의사를 밝힌 일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특사단의 일본방문에 그치지 말고 한 반도미래 디자인에도 동참시키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이미 미국이 CPTPP에 재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서둘러 가입하고 동시에 한일 FTA 교섭 재개, 한중일 FTA 교섭을 촉진하여 동아시아 역내시장 확대, 통상마찰형 글로벌 과잉공급의 합의적 조정,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안보와 경제 리스크를 절감하려면 동아시아의 다층적 광역자유경제권역을 확대해 가는 이 길 밖에 없다.

지난 13일 20%의 압도적인 차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남서부 제18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예상외로 민주당 강경파 후보에 패배함으로써 11월 중간선거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돌출언행과 단기 성과에 연연할 것이다. 일방적 공세적 경제보복은 백해무익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는 공허하기만 하다. 오히려 합리적 온건파들이 권력주변부로

물러나고 원리주의적 자유무역으로 국가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일부 강경론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협상은 바쁘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현안인 한미FTA 재협상에 충실하되 관세폭탄 대상품목의 인위적인 대미수출 삭감을 통한 대미흑자 축소나 미국식 결과중시형 접근방법 수용은 금물이다. 지재권보호를 비롯한 규범과 분쟁절차 등 룰 중시, 동아시아 역내상호 수요확대, 자본시장 육성, 내수주도 성장전략으로 대미수출의존도 축소와 글로벌 불균형 시정의 바른 길로 가야 한다.

국익에 있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선진무역강국으로서 실질적 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안이한 재정투입과 양적 금융완화 등의 영양제가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과 규제철폐 등 외과수술도 불사하는 전략적 사고를 공유해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